

I·SEÒUL·U

#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



서울시는  
노숙인도 시민의 한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노숙인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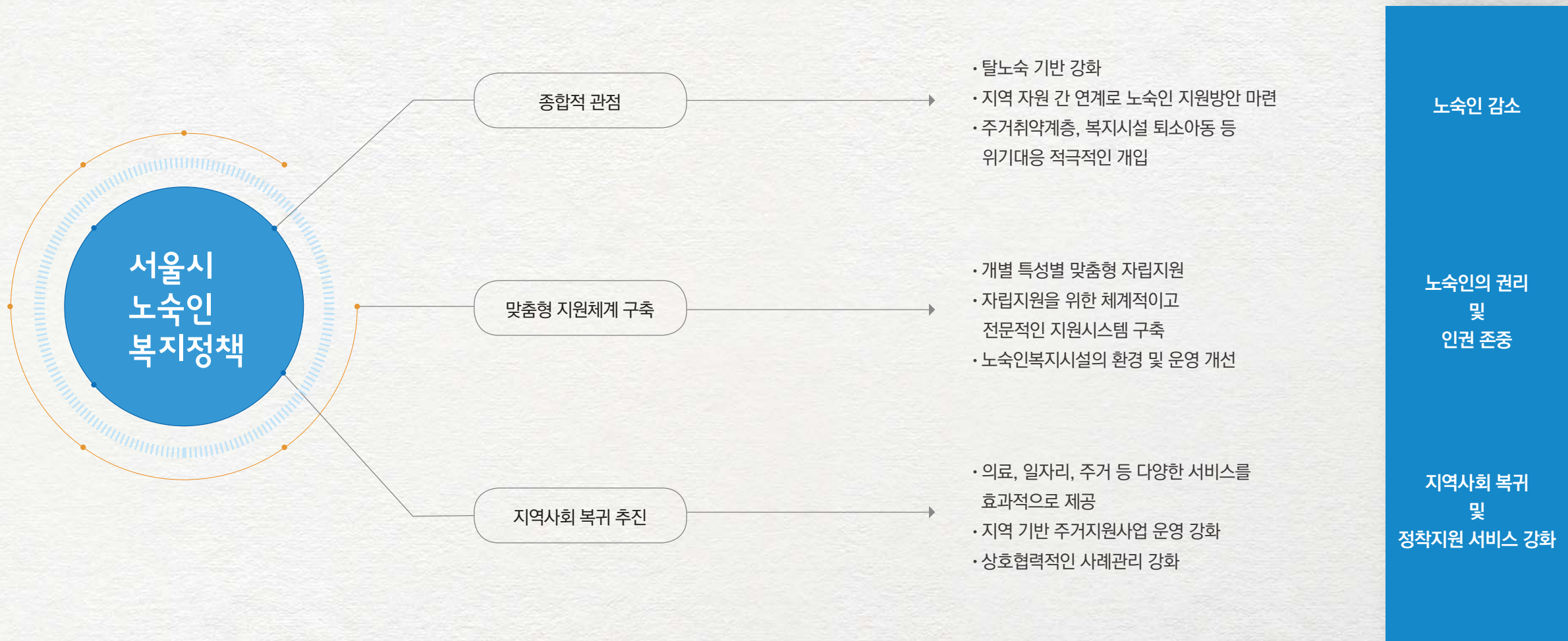
04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정책방향과 목표
06	서울시 노숙인서비스 지원체계 변화
08	법률 변화
10	연도별 주요 성과
14	노숙인복지정책 변천 과정
16	사업분야별 현황
38	수치로 보는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42	에필로그

#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정책방향과 목표

서울시가 함께하는 노숙인복지정책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 정책 방향

## 목표



# 서울시 노숙인서비스 지원체계 변화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협력적·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변경전 ▶

변경후





# 법률 변화

관련 법과 조례 제정으로 노숙인  
일자리·주거·의료 정책 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주요 성과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지원하는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부서 간 협력 강화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노숙자 보호 및 관리대책 수립 (노숙자 진료계획, 노숙자대책 특별보호·특별상담 등 포함)
-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시립근로자합숙소,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희망의 집 개소·운영

- 자유의 집(노숙인 응급쉼터), 자활의 집, 동절기 재활 시범 쉼터 설치·운영
- 노숙자 보호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노숙자 자활쉼터 설치·운영
- 노숙자결핵 실태조사 및 진료 대책 수립
- 노숙인 시설 입퇴소관리 시스템 구축

-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책 수립
- 자유의 집 '재활프로그램센터' 시범 운영, 정신건강센터 개소·운영

-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 개소·운영
- 드롭인센터 개소·운영
- 자활영림단 발대식

- 여성 거리노숙인 드롭인센터 시범사업 운영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노숙인 중간쉼터 운영, 알코올 및 정신건강 노숙인 전문재활 쉼터 개소·운영
- 노숙인 기초해결센터 개소 (중간쉼터)
- 구 근로자 합숙소 기능 폐지 및 시설 이관
- 거리노숙인 주민등록 복원사업 및 수급권지원 사업 실시

- 노숙인 특별자활사업 실시
- 상담보호센터 이용유도반 편성운영(야간 상담)

-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 (공동모금회 시범사업), 단신자 매입임대주택사업 운영 (국토교통부 사업)
-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시행
- 노숙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알코올·정신질환자 노숙인' 감소를 위한 거리의료상담반 등 시범운영
- 노숙인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

- 노숙인 여성재활쉼터 개관
- 노숙인쉼터 특성화 추진

-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 및 저축 관리 등 경제적 지원 본격 시행
- 자존감 회복으로 자활지원을 위한 인문학 강좌 시범운영

- 희망의 인문학 과정 운영





## 연도별 주요 성과

노숙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숙인시설의 환경 및 운영을 개선하고,  
노숙인 특성별 맞춤형 지원 기능 강화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급식장 개소·운영</li> <li>· 거리노숙인 종합대책 수립·운영 (특별지원반 구성 등)</li> <li>· 임시주거지원 사업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역 현장 '응급대피소' 신규 개소·운영</li> <li>· 서울시 '희망지원센터' 신규 확장 개소·운영 (기존 서울역 상담소 확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인 희망프레임 운영</li> <li>· 노숙인의료급여 1종 규정 시행 (「의료급여법」)</li> <li>· 서울시 노숙인 권리정전 발표</li> <li>· 거리노숙인 '희망원룸' 설치·운영</li> <li>·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구축</li> <li>· 노숙인 24시간 위기대응 콜센터 운영</li> <li>· 거리노숙인 정신과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팀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최초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리노숙인 공동작업장 시범운영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인 일자리종합지원 센터 설치·운영</li> <li>· 노숙인 주거지원 사례관리 지원대책</li> <li>· 여성노숙인 응급보호 및 일시보호시설 설치·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인 희망아카데미 운영</li> <li>·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li> </ul>

# 노숙인복지정책 변천 과정

노숙인복지정책은 초기 단속에서 보호로,  
보호에서 인권으로 전환하고 있어 노숙인의 인권을 유지하면서  
노숙문제를 해결할 공공의 책무성 강화

☆

##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과 응급구호 체계 구축

1998년 ~ 2005년

☆

## 노숙인정책 제도화와 공공의 책임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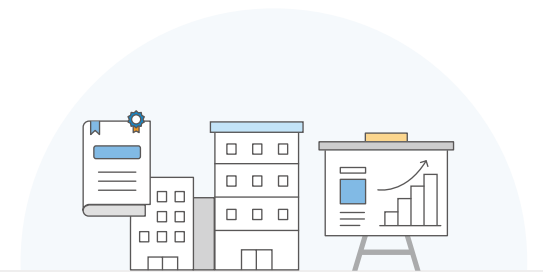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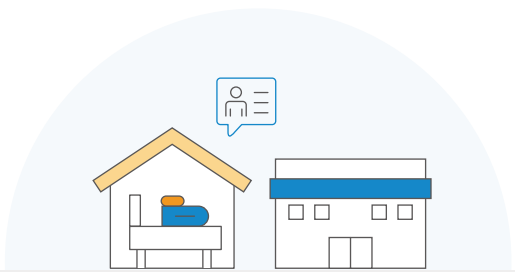
2005년 ~ 2018년

민간단체인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  
시민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시작으로 실직노숙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이 진행되었다.

**실업 노숙대책**을 통해 거리노숙인의  
일부 문제가 완화되었고 노숙인 욕구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내실화를 도모한 시기다.

2012년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다.



서울시는 응급보호를 위한 쉼터 공급과 함께 상담,  
자활·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실시

서울시는 거리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고 노숙인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와 함께 서울시 노숙인  
대책 체계화

서울시는 거리노숙인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실시

서울시는 노숙인이 노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실시

서울시는 1998년 5월 실직자와 노숙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해 주기 위한 서울  
시립근로자합숙소(현 영등포보호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1998년부터 서울시는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  
종교·민간단체와 함께 노숙인 및 부랑인을 대상으로  
상담, 급식, 의료 등의 정책을 논의하여 진행하였다.

거리노숙인 지원을 위해 거리노숙 보호체계를 쉼터  
중심에서 상담보호센터(이후 종합지원센터, 일시  
보호시설) 중심으로 개편하여 거리노숙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노숙인 일자리 정책은 초기 임시거처를 제공·입실  
하기 위한 조건부 지원 정책에서 점차적으로 노숙  
인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 실질적 자립의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으로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1998년부터 단순 실직노숙인 대상 임시  
생활공간인 쉼터를 공급하였고, 이후 쉼터는 자활·  
치료·재활·가족 쉼터 등으로 유형화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서울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민간단체는 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수행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초기 긴급보호 목적인 쉼터에서  
대상별·특성별로 유형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노숙인 주거 정책은 주거비 지원과 주택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였고, 최근에는 노숙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근로 유지 및  
건강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지원인력 배치)을 강화  
하고 있다.



개요·흐름



# 1. 거리노숙 위기지원

## 거리에서 응급센터로

1998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구)부랑인과는 다른 실직한 노숙인들이 급증하면서 서울시는 '노숙인 보호 및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노숙인 보호사업을 시작하였다.

1998년 7월 이후 부랑인 수용 중심의 노숙인 정책은 새로운 노숙인(소위 실직 노숙인)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전환하였다.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쉼터를 설치하고,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등으로 노숙인의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서울시의 노숙인정책을 시작하였다.

## 서울시의 거리 서비스 확대와 다양화

2001년 이후 노숙인쉼터라는 노숙인쉼터라는 거주시설 중심의 체계만으로는 노숙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시설 입소 중심에서 사례관리 상담활동으로 전환하여 거리노숙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거리노숙인에게 거리 잠을 자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구현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 거리노숙인에게 특별자활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수입을 쪽방, 고시원 등의 월세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를 벗어나게 하려는 서울시 정책이 시작되었고, 민간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을 통해 거리노숙인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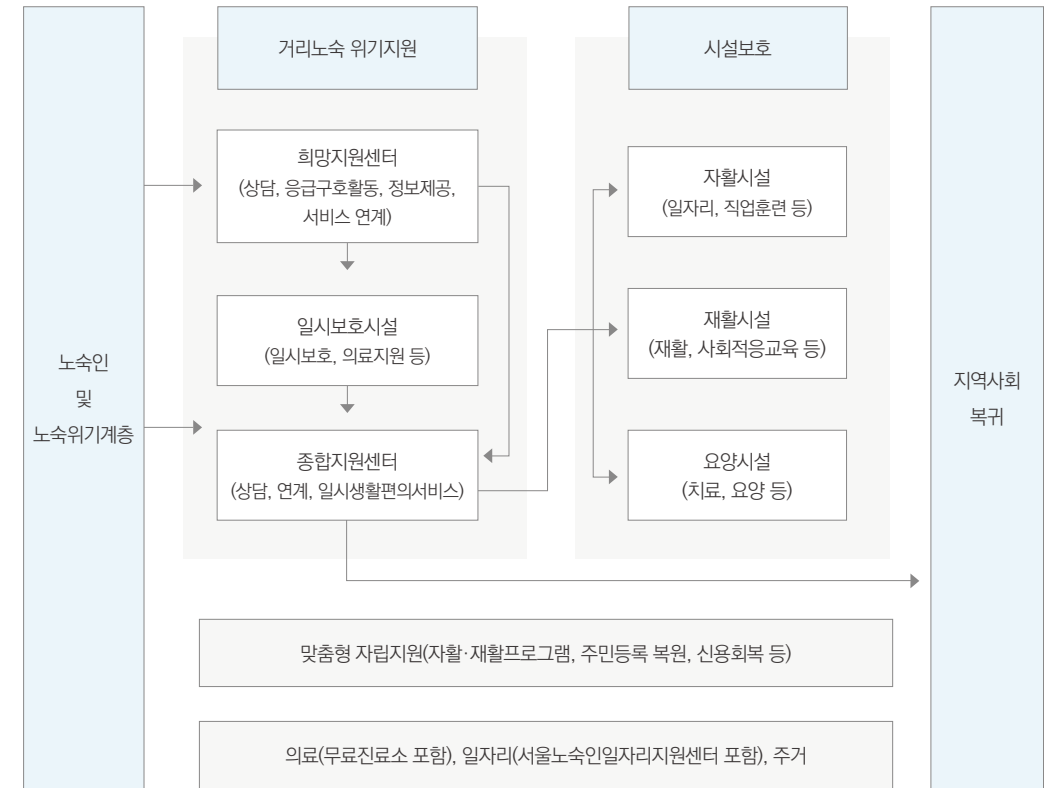
## 위기대응체계 강화

서울시장이 강조한 '거리에서 얼어 죽는 사람 없게 하겠다'는 모토에 따라 서울시의 거리노숙인 대책이 강화되었다.

2011년 겨울부터 서울역우체국 지하도에 마련된 응급대피소 운영, 2012년 정신 건강팀 신설과 활동, 2012년 동절기에 시작된 '위기대응콜' 사업, 24시간 아웃리치활동을 위한 상담원 추가배치, 경찰·소방서·병원 등과의 보호체계 구축, 2017년 서울역희망지원센터 확장 개소 등 위기대응을 보다 체계화하고 거리노숙인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였다.

노숙인들의 주거지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법적 전달체계의 경로 외에도 거리노숙을 탈피할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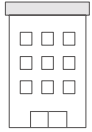
## 서울시 노숙인 지원 절차



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    응달샘상담보호센터(일시보호시설)    만나샘(일시보호시설)

## 1. 거리노숙 위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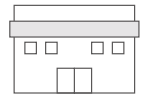
### 주요 사업



#### 희망지원센터 운영

거리노숙인 상담 및 위기지원 활동을 위해 거리노숙인 밀집 지역에서 거리노숙인을 위한 시설 입소·주거지원 등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겨울철 및 폭염기 등 취약시기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하여 노숙인의 안전보호를 실시하며, 겨울철에는 거리상담반을 확대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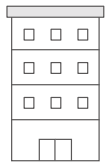


#### 일시보호시설 운영

일시보호시설(4개소)은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일시 보호와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은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숙식 제공, 의료지원, 샤워·이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각종 상담을 진행한다.

전체 일시보호시설 중 여성노숙인이 이용 가능한 일시보호시설은 1개소가 있다.



#### 종합지원센터 운영

종합지원센터(2개소)는 거리노숙인 상담, 시설 입소 연계, 일시 생활편의 서비스(숙식 등)를 제공하여 신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거리노숙인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를 지원한다.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 생활을 위한 주거지원사업 등을 통해 신속히 지역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등록 복원, 신용회복 등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 잠자리(월 20일 이내), 무료급식 제공 등의 기초생활을 지원한다.(일시보호시설 기능)



####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 운영

노숙인 상담, 정보제공, 현장출동 등을 위해 전문상담원 2명, 공공근로 8명으로 구성하여 24시간 운영한다. 현장출동 기관은 평상 시(봄~가을) 1개소이고, 겨울철에는 5개소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 노숙인 정신건강팀 운영

알코올중독 및 정신과 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방하는 노숙인 또는 거리노숙인을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준다.

알코올중독 및 정신과 치료 전문시설 등으로 연계하고, 주거 및 생활 상담을 지원한다.



#### 노숙인 진료시설(무료진료소) 운영

거리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기초수급자 제외) 등을 대상으로 일반(내과) 질환, 정신과, 한방진료 등을 실시한다.

서울역 무료진료소와 영등포 무료진료소가 있으며 진료 과목은 일부 차이가 있다.



####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에게 주거욕구에 따라 단기적으로 고시원, 쪽방 등의 월세를 지원한다.

집중적인 사례관리(주민등록 복원, 장애인 등록, 기초수급자 선정, 일자리지원 등)를 통해 거리노숙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 서울역 실내급식장 운영

서울역 따스한채움터에서 거리급식 봉사단체들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무료로 제공한다.

따스한채움터는 무료 식사 외 다목적 이용공간, 세탁실, 도서실 등으로 구성 되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 동절기 응급잠자리 및 침낭·매트 등 지원

시설 이용 거부 거리노숙인, 산재 거리노숙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동절기에는 응급잠자리, 응급쪽방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한파특보 등 저체온증 우려 시 침낭과 매트 등을 제공한다.

개요·흐름



## 2. 노숙인 의료

### 노숙인 응급구호를 시작으로 의료정책 출발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노숙인들의 의료대책은 1998년 4월 서민생계 안정대책의 '대도시노숙자 특별보호사업' 내용에서 확인된다.

1998년 5월 주요 노숙지역인 서울역광장에 의료보호소를 설치·운영하는 '노숙자 특별보호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해 9월 서울시의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 추진계획에 따라 노숙인 ID카드를 발급 관리하여 의료서비스도 제공하였다.

### 2002년 이후 서울시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을 통한 거리 및 시설 노숙인 진료체계 구축

2001년부터 거리노숙인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역에 현장진료소를 운영하고, 2002년 4월 서울역 광장의 (舊)중구 여성복지상담소에 무료진료소를 개소하여 상설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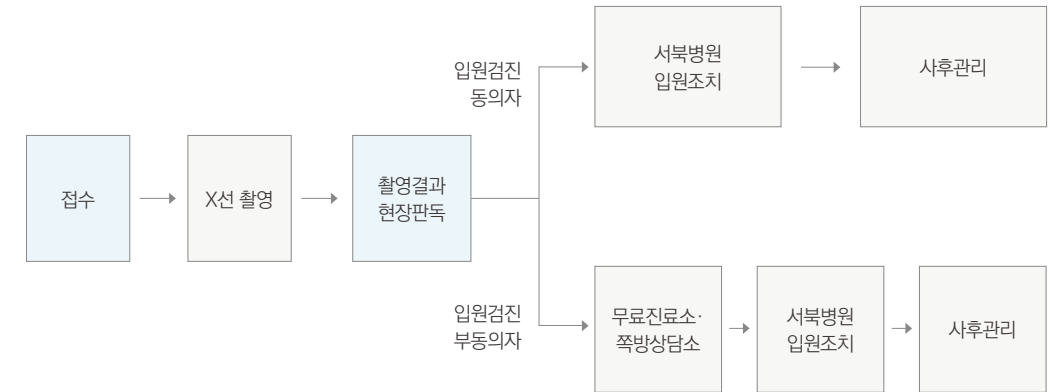
영등포보현의집 내 무료진료소(2004년)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건강검진 사업을 지원하였다.

### 2000년 이후, 감염성 질환 대책으로 노숙인 결핵환자 관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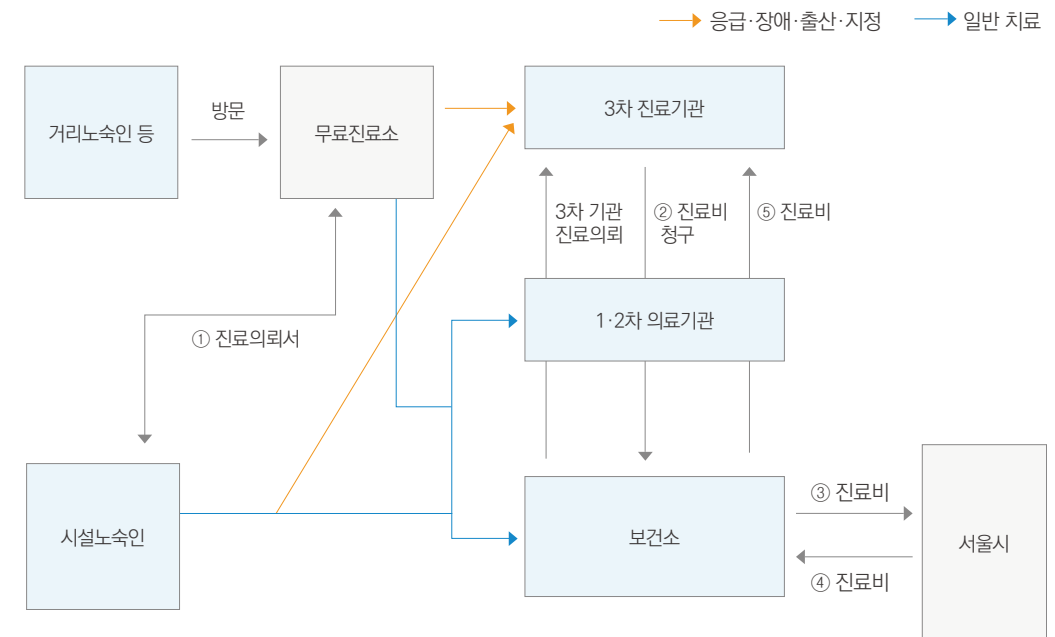
2000년 5월 노숙인 결핵실태 조사 및 진료대책을 통해 쉼터 입소자는 결핵 1차 검진, 노숙밀집지역 노숙인은 결핵 정기검진 및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을 실시하였다.

2003년 감염성질환자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결핵질환으로 고통 받는 노숙인 결핵환자가 주거와 식사 걱정 없이 결핵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결핵질환이 있는 노숙인이 무료로 거주할 쪽방 및 도시락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 결핵검진 자원 절차



### 노숙인 의료지원체계





## 2. 노숙인 의료

### 주요 사업

서울시 노숙인 지정 의료시설  
전체 **77** 개소  
(2019년 기준)

국·공립병원

**10** 개소

일반 병의원

**1** 개소

보건소

**27** 개소  
(경기도 지역 포함)

무료진료소

**2** 개소

약국

**37** 개소

### 서울시 노숙인 의료보호 시스템으로 진료비 지원(진료의뢰서)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거리·시설노숙인, 쪽방주민 등을 대상으로 노숙인 지정 진료시설을 통해 노숙인 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노숙인 지정 의료시설은 전체 77개소(2019년 기준)이고, 국·공립병원 10개소, 일반 병의원 1개소, 보건소 27개소(경기도 지역 포함), 무료진료소 2개소, 약국 37개소 등이 있다.

### 결핵검진사업

결핵 고위험군인 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검진을 통하여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치료 등 결핵 전염 예방 및 관리를 지원한다.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서울역, 영등포역), 쪽방촌(영등포, 서울역, 남대문, 돈의동, 창신동) 지역을 중심으로 연 4회 실시(상·하반기 2회씩)한다.

검진 내용은 검진차량을 이용한 흉부 X-선 촬영, 유소견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객담검사 등이다.

### 노숙인 정신건강팀 운영

정신건강팀 주요활동은 알코올 및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위기 개입, 병원 진료, 사례관리, 지역사회 정착지원 등이다.

정신건강팀 상담과정에서 거리노숙에 처해 있는 노숙인들에게 주거서비스 연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연계도 진행한다.

### 독감 예방접종 사업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주)사노피 파스퇴르가 후원하는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노숙인시설 입소자와 쪽방주민(65세 미만)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노숙인 독감 예방접종 실적 (단위: DOS, 명)

년도	후원물량	접종인원
11년	2,500	1,866
12년	5,000	3,294
13년	4,000	3,460
14년	4,000	3,593
15년	3,800	3,495
16년	3,800	3,770
17년	4,000	4,000
18년	3,700	3,623

※ 11년은 폐렴 동시 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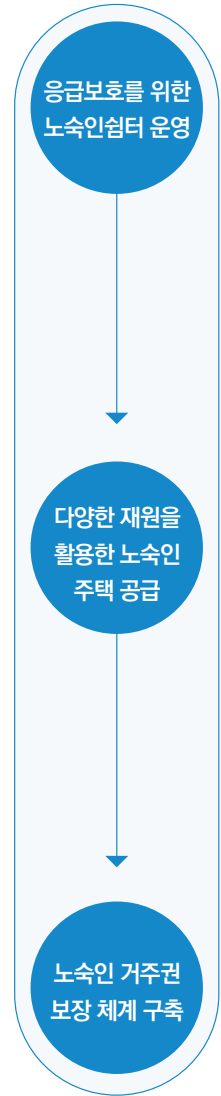
※ 남은 물량은 기타 의료 사각지대 시민들에게 무료 접종

### 거리노숙인 진료시설(무료진료소) 운영 사업

무료진료소는 서울역 무료진료소와 영등포 무료진료소 등 2개소이고, 이용 대상은 거리·시설노숙인과 쪽방거주자이다.

2017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되어 운영 중이며, 지원 내용은 진료·투약, 2차 진료 의뢰, 결핵관리, 건강검진 등이고, 서울역 무료진료소와 영등포 무료진료소에 따라 진료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

개요·흐름



### 3. 노숙인 주거

#### 노숙인쉼터 중심의 주거서비스

외환위기 이후 많은 실직자들이 노숙인으로 전락하면서 '실직노숙인'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초기 노숙인정책은 노숙인쉼터를 중심으로 실직노숙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쉼터 입소 노숙인 전원이 공공근로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999년 4월부터 노숙자 관리시행 계획에 따라 쉼터 입소자를 대상으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자활의 집 주거지원서비스를 운영하여 전세보증금을 용자 지원하였으나, 2012년부터 사업을 중단하고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하였다.

#### 노숙생활 예방적 차원의 주거서비스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응급잠자리 형태로 단기 숙소를 제공하였다.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등은 거리노숙인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임시주거 지원이나 공공임대주택사업 운영기관과의 연결 역할을 수행하였다.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서비스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재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으로 시행되었고, 3개월 이내 월세를 지원하여 단신자용 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택 제공과 함께 공공복지서비스와의 연계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열린여성센터 지원주택



비전트레이닝센터 지원주택



비전트레이닝센터  
매입임대주택

#### 노숙인을 대상으로 주택 제공(한시적 거주 기간)과 노숙인의 재노숙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주자 사례관리 사업 실시

입주자 사례관리 사업은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공동생활가정(일부 자활의 집 포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원사업, 희망원룸 등에서 실시한다.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입주자 사례관리 사업은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에 입주시키고, 행정지원, 취업지원, 방문상담 등을 진행한다.

####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노숙인 주택 공급

다가구 임대주택 시범사업(국토교통부)은 2006년 노숙인 일자리 갖기 참여자 대상으로 주거 확보 또는 시설 입소 조건을 부여하여 시행되었다.

중앙정부(국토교통부)는 2006년 노숙인 대상 단신계층용 매입임대 시범사업 이후 운영기관(노숙인시설과 단체)을 통해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을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제공하고 있다.

#### 노숙인을 대상으로 거주권을 보장하면서 생활관리(사례관리 포함)를 결합한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 실시

노숙인 지원주택은 알코올중독·정신질환 노숙인 등 독립생활 영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건강·위생관리 등 사례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거와 서비스(사례관리 포함)를 결합하였다.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8호를 운영하였고,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5.3.)를 제정·공포하면서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 3. 노숙인 주거

주요 사업

2010년~  
현재

#### 거리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거리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은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만성화되는 노숙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동절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거리노숙인 또는 노숙위기계층에게 최장 6개월의 월세 비용과 1회 생활용품비를 제공한다.

2012년~  
현재

####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사업

단신자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은 2005년 빈부격차차별시행위원회에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체계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임대주택 정책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007년도 국토교통부가 노숙인 및 쪽방거주자를 위해 300호 시범사업 진행을 발표하면서 노숙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시작되었다.

사례관리자가 입주자 초기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문상담 등을 통한 일자리·저축·월세납부·건강·알코올 문제 등 생활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입주자 자립지원 및 반사회, 입주자 회의, 자조모임 등을 통한 입주자 간 갈등 해소 및 상호 협력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  
현재

#### 노숙인 공동생활가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기관에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용도의 주택을 활용하여, 동료 결합 또는 모자 가정이 생활하는 주택으로 제공한다.

노숙인 공동생활가정은 별도의 거주 기간은 없으나 입주를 희망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근로능력과 안정적 수입이 가능한 2인 이상 노숙인이 함께 생활한다.

2012년  
시범사업 이후  
~ 현재

#### 희망원룸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사생활 보장이 가능한 원룸형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희망원룸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이며, 6개월 단위 연장심사를 통해 최장 2년 동안 생활할 수 있다.

월 단위로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임대료의 일부는 희망 자금으로 적립하여 퇴소 시 지급하고, 입주자에게는 취업알선, 임대주택 연계 주거지원, 신용회복등을 지원한다.

5년(2012년 12월~2017년 12월) 간 시범운영 이후 2018년부터 1개동 27호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시범사업 이후  
~ 현재

####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

노숙인 지원주택은 계약 기간 2년, 2년마다 계약 갱신하여 최대 20년 계약이 가능하며, 입주자 대상으로 생활공간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초기 노숙인 지원주택은 38호 시범운영하였고, 2019년 12월 기준 80호를 운영하고 있다.

노숙인 주거권을 위한 노력  
(서울시 지원주택)

비전트레이닝센터 지원주택(좌)  
열린여성센터 공동생활가정(우)





## 4. 노숙인 일자리

개요·흐름



### 외환위기 직후 실직노숙인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대규모 공공일자리 창출·추진

서울시는 '노숙자 보호 및 관리대책'(1998년 4월)에 따라 노숙인 취업알선을 강화하기 위해 중구와 영등포구에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무료 직업훈련을 지원하였다.

1998년 8월부터 시작된 희망의 집(현 자활·재활시설) 입소를 통해 거리에 있던 노숙인들이 쉼터로 이동하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서울시는 노숙자특별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청과 함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1999년~2002년)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평균 500명의 노숙인이 강원도 인제, 정선, 경상북도 울진, 봉화 등 4개 지역 산지에 파견되어 산림현장에서 일을 유지하는 성과가 있었다.

### 노숙인 사업의 지방이양(2005년) 이후 서울시는 근로능력에 따른 노숙인 일자리 사업 적극 추진

특별자활근로는 단시간 근로로 건강상태와 근로능력이 취약한 노숙인을 참여시켜 주거지를 확보하고 자활을 도모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상담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거리노숙인들에게만 일을 제공하였다.

이후 노숙인 일자리 찾기 사업(2006년)을 시작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한 노숙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 타부처(부서) 일자리 사업과의 협력으로 노숙인 자활을 강조한 노숙인 일자리 찾기 사업 실시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으로 2007년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브릿지상담보호센터에 노숙인 취업지원을 위한 '새희망고용지원센터'(노숙인 전용)를 개소하였다. 이후 2012년 영등포보현의집에서 '도움닫기 취업센터'(고용노동부 위탁사업)를 개소하였다. 서울시에 총 3개의 취업센터가 운영되었으나, 2019년 12월 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중단하였다.

2010년 서울시가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던 시기에 맞춰 노숙인 분야에서도 '서울형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하였다. 그동안 특별자활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 중 일부와 민간기관의 사업제안을 받아들여 2010년~2011년 두바퀴희망자전거, 참살이영농조합법인, 엔젤영농조합법인, 빅이슈코리아, 사랑의쌀화환, 착한사람들 등 6개가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으며, 현재 두바퀴희망자전거, 빅이슈코리아가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폐업하는 보도상영업시설물(가판대, 구두 부스 등)을 노숙인에게 임대하여 자활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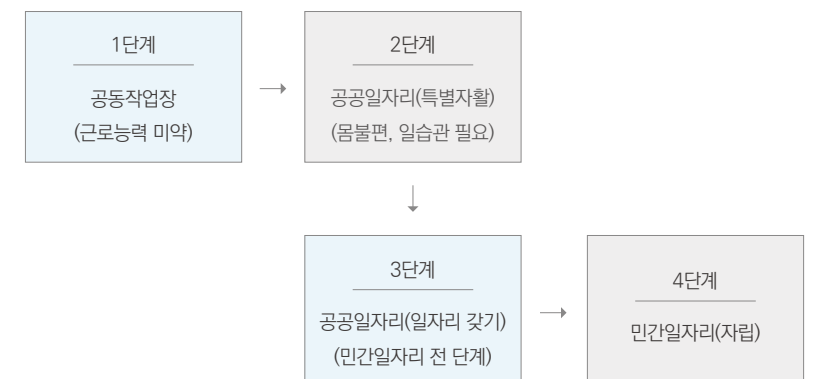
공동작업장 모습  
(출처: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 근로능력이 미약한 노숙인을 위한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지원과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발굴·연계 강화

2014년 '거리노숙인은 근로무능력자'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 서울역 우체국 지하도(응급구호방)와 영등포보현의집에 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하였다. 기존 급여 제공방식이 아닌 작업한 만큼 실적급(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근로환경을 제공하여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기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3개소에 설치된 고용지원센터 기능을 통합한 '서울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서울특별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부설, 2015년)를 설치하였다. 이 센터는 노숙인 상담, 일자리 발굴, 민간기간 연계 취업알선, 사회적기업 창업 등 종합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는 취지이다.

#### 노숙인 근로능력에 따른 단계별 일자리 지원체계



## 4. 노숙인 일자리

### 주요 사업



브릿지종합지원센터: 공동작업장

서울시, 노숙인 장애인재활 직업 돕는  
취업박람회(우측 아래)



일자리 갖기 사업: 서울역, '코레일 청소사업단'  
활동(좌) <출처: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교육:  
자활프로그램(우)  
<출처: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숙인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공동작업장은 근로능력 및 의지가 미미한 노숙인 등에게 부업 형식의 일감을 제공하여 일하는 기초 습관을 형성한 후 단계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함이다.

2014년 거리노숙인의 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역 지하도 응급 대피소, 영등포보현의집 응급대피소 2개소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14개소를 운영 중이다.

####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전일제, 공공일자리)

근로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 및 자활이 가능한 시설 추천을 받은 노숙인이 대상이며,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근로 내용은 공원 청소, 재활용품 분류, 업무 보조, 카페 운영 등이다.

서울시·산하사업소, 동부시립병원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 갖기 사업에 참여자 또는 종료자는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 민간기업 취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발굴 지원

노숙인의 근로 욕구에 맞는 취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주로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안정적인 민간일 자리를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간일자리 연계를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민간기업과 제공할 일자리를 검토한 후 노숙인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매칭한다.

#### 노숙인 특별자활근로 (반일제, 공공일자리)

노숙인쉼터 입소 등을 거부하고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서울시 차원의 특별자활 사업을 시행하여 참여자들이 임금 소득으로 주거와 생활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리노숙인을 줄이기 위함이다.

하루 5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환경정비, 급식보조 등의 근로를 하며 특별자활근로 참여자는 가급적 일자리 갖기 사업으로 전환하여 연계한다.

근로능력이 약한 노숙인이 전일제 일자리인 일자리 갖기 사업과 민간일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일제 일자리를 통하여 자기통제능력과 근로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서울특별시립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부설)는 노숙인의 취업 전부터 후까지 일자리지원 전 단계에 걸쳐 구직상담, 취업정보 제공, 일자리 발굴 및 연계, 교육훈련, 사례관리를 통해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기능은 민간일자리 발굴 및 연계, 공공일자리 연계, 사회적경제 일자리지원, 노숙인 일자리네트워크 구축, 교육·조사·연구지원(취업준비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 포함) 등이다.

## 5. 노숙인 시설보호

### 개요·흐름



### 실직노숙인 증가에 따른 임시숙소 지원과 취업·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숙인 쉼터 공급

1998년 초 서울역 주변으로 실직노숙인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위한 1일 숙소, 취업알선, 무료식사 등을 통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립 근로자합숙소를 마련하여 실직노숙인을 입소시켰다.

### 중간쉼터 설치 및 기능 분화

자유의 집은 쉼터 보호 이전의 중간쉼터로서 사정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1999년 1월 개소하였다. 생활상 제약을 최소화하여(음주도 가능) 노숙인쉼터인 희망의 집 입소를 거부하는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자유의 집 입소를 권유하였다. 자유의 집은 한 달 이상 머무는 노숙인이 많아 사실상 쉼터의 기능을 하였다.

### 노숙인쉼터 특성화 사업으로 단기보호, 특성화 쉼터, 자활·재활프로그램 등 운영을 통해 전문성 강화

희망의 집(쉼터)은 자유의 집(중간쉼터)을 포함하여 2003년까지 74개소를 운영하였으나, 이 시기에는 외환위기 직후에 비해 노숙인의 수가 감소하면서 노숙인시설(희망의 집) 축소 및 통·폐합을 추진하였다.

### 노숙인복지시설이 기능중심으로 유형화되어 개편·운영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 개정(2005년)을 통해 노숙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도화의 단초가 되었다.

「노숙인복지법(약칭)」(2011.6.7. 제정)이 2012년 시행됨에 따라 기존 부랑인 복지시설과 노숙인쉼터를 노숙인 복지시설로 일원화하였다. 그 결과 시설은 기능 중심으로 유형화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자활시설, 요양시설, 재활시설로 구분하였다.

### 주요 사업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자활시설은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이 입소하여 복지서비스와 고용지원 등을 통해 자활·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서울시 노숙인 자활시설은 23개소고, 이 중 여성노숙인이 입소 가능한 자활시설은 6개소(가족·모자시설 포함)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은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통해 자립기반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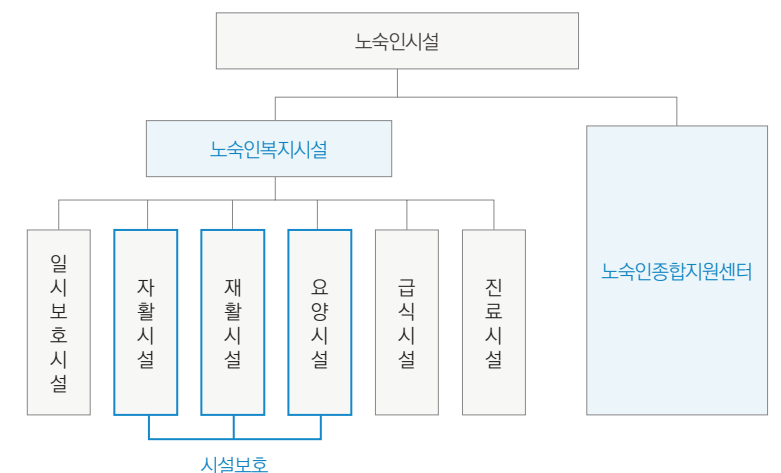
서울시 노숙인 재활시설은 8개소가 있고, 이 중 여성노숙인이 입소 가능한 재활시설은 2개소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시설은 건강상 문제로 가정·사회 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 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노숙인 요양시설은 6개소로, 이 중 여성노숙인이 입소 가능한 요양시설은 2개소다.

### 노숙인시설 체계도





## 6. 노숙인 자활·재활 프로그램 분야

### 주요 사업

외환위기 직후 노숙인쉼터 입소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자활·재활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노숙인 일자리찾기 사업 내실화와 근로유인책을 위한 노숙인 신용회복사업과 정착장려사업 실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울시 자체·공모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자체 운영 프로그램

서울시 노숙인 신용회복사업(2008년~현재): 신용불량 노숙인과 쪽방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체납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노숙인 사진교육 '희망의 프레임'(2012년~현재): 조세현 작가와 함께하는 사진 교육과 전시회를 개최하고, 희망사진관을 개소하여 2015년부터 액자기념사진, 사진전사 머그컵, 사진전사 수건 등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제공과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술학교 운영(2015년~현재): 현악기, 국악, 퓨전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공연을 통해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응급처치 교육(2015년~현재): 심폐소생술, 붕대사용법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 사업 (국·시비 매칭)

보건복지부는 희망의 집 자활프로그램 공모사업(1999년 10월)을 시작하였고, 2005년 지방이양 후 잠시 중단하였다가 2015년부터 자활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 이전 공모사업은 위기상담프로그램, 대인관계프로그램,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소규모 창업프로그램 등 대규모 노숙자쉼터 중심으로 심리 안정과 일자리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2005년 이후 선정된 프로그램은 문화, 교육, 강연, 기술훈련, 재활프로그램, 소규모창업프로그램 등이며, 최근에는 노숙인 사진과정, 노숙인 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등도 진행하고 있다.

## 7. 노숙인 인권

### 주요 사업

노숙인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노숙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노숙인 인권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 대두, 노숙인이 시민으로서 권리와 공공서비스 접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숙인 권리장전' 발표

###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노숙인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노숙은 경제적 빈곤, 이용 가능한 저렴한 주거의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태로, 서울특별시시는 노숙인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하고, 노숙인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숙인 당사자와 시민, 단체 및 기업들과 함께 노력한다.

- 제1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공공서비스 접근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제2조(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노숙상태에 놓인 경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제3조(특별보호 대상) 청소년 노숙인·여성노숙인·자녀를 동반하거나 장애를 가진 노숙인은 일반노숙인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4조(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노숙에서 벗어나거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제5조(자기 결정권)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제6조(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조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시설 이용이나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착취·학대·방임 등 신체적 위해를 받지 아니한다.
- 제7조(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인이 믿는 종교를 이유로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 제8조(주거지원을 받을 권리)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시설에 의한 보호, 임시주거비 지원 및 임대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고용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교육·취업알선·일자리 지원·고용정보 제공 등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고용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권) 시설종사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이나 타 기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당사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정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참여 및 의견 진술권) 생활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12조(통신의 자유)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자는 전화·우편·전자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개인의 의사 또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 제13조(재산 관리권)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에 대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제14조(사생활 보호권) 개인사물함 등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물건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 제15조(보건위생권) 건강상 유해요인이 없는 청결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제16조(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 시설에서 정한 생활규칙 범위 내에서 시설 출입, 편의시설 이용 등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숙인의 권리는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노숙인 권리장전"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한다.

2012. 6  
서울특별시

###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숙인 성공사례』 e-Book 제작·배포(2018년)

서울시는 노숙인·쪽방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인이 함께 참여하여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성공사례를 책자로 제작하였다.

책자에 소개된 성공사례는 전체 70여 개 사례 중 40개 사례를 선정하여 발간하였다.

### 노숙인 초상권 침해 등 피해사실 확인 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법적 구제 조치 실시

1인 미디어제작자가 노숙인의 사생활을 흥밋거리로 삼아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끄는 등 각종 매체에 노숙인의 얼굴과 사생활이 공개되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노숙인의 초상권 침해 등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서울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자문을 통해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명의도용 등 피해사실을 입어도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구제 받지 못하는 노숙인을 위해 '거리상담반'을 통해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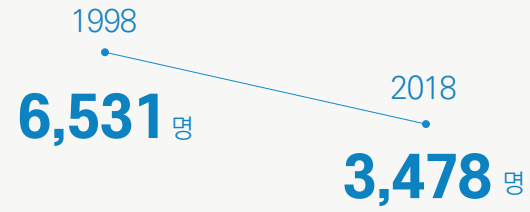
서울시 노숙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노력(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수치로 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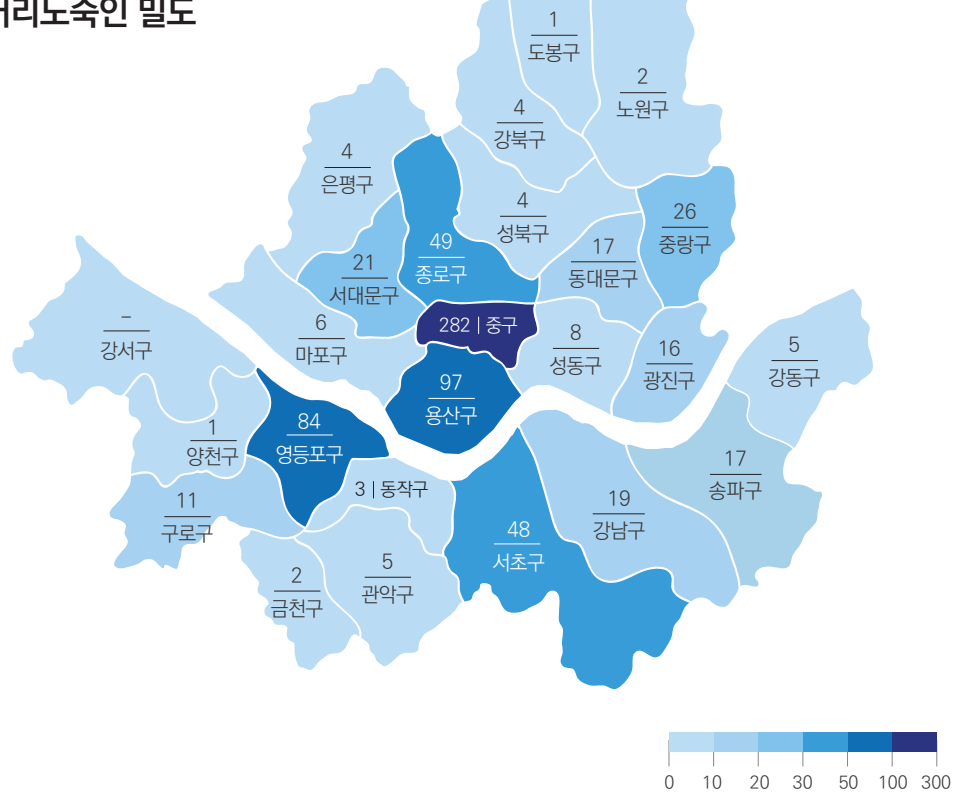
##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2018년 기준)

노숙인 감소를

**46.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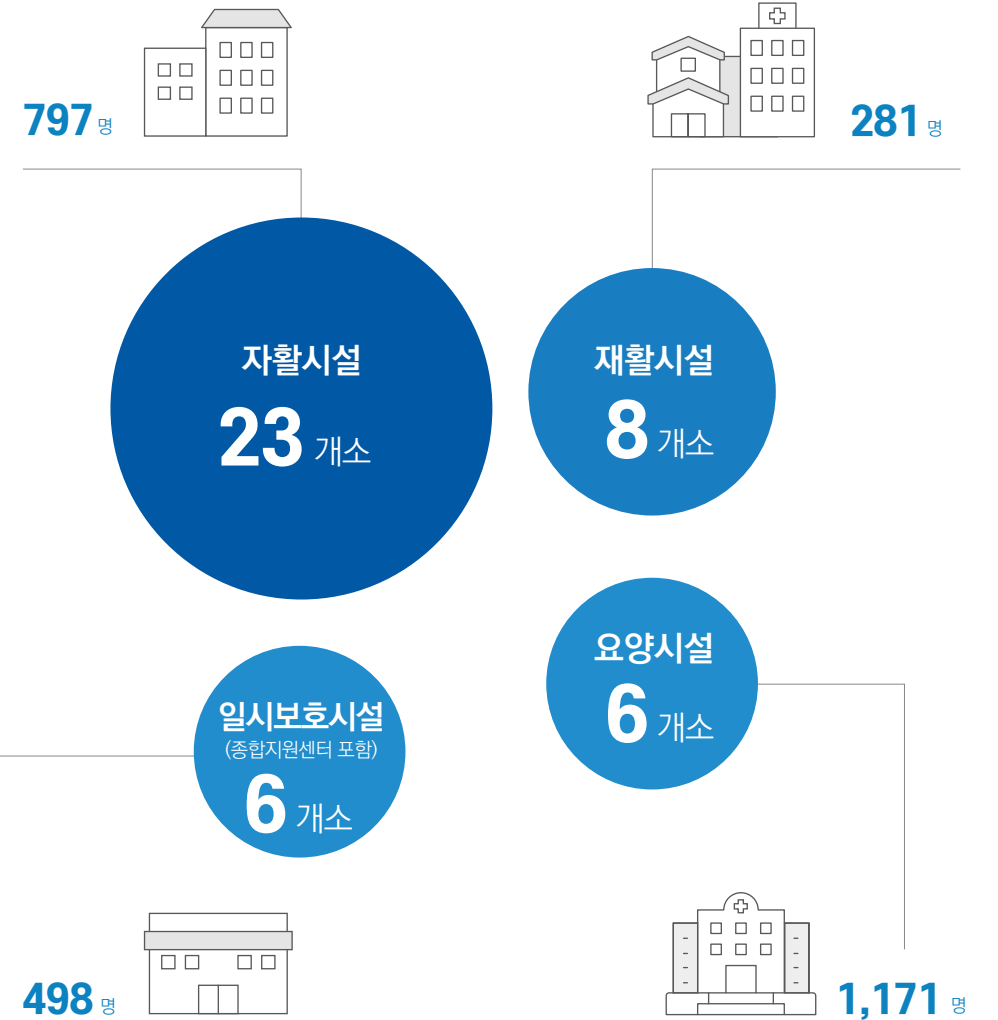
2018 자치구별  
거리노숙인 밀도



노숙인 시설 개소수 및  
이용인 수

전체 시설노숙인 수  
**2,747** 명

노숙인 시설 전체 개소수  
**43** 개소





# 수치로 보는

##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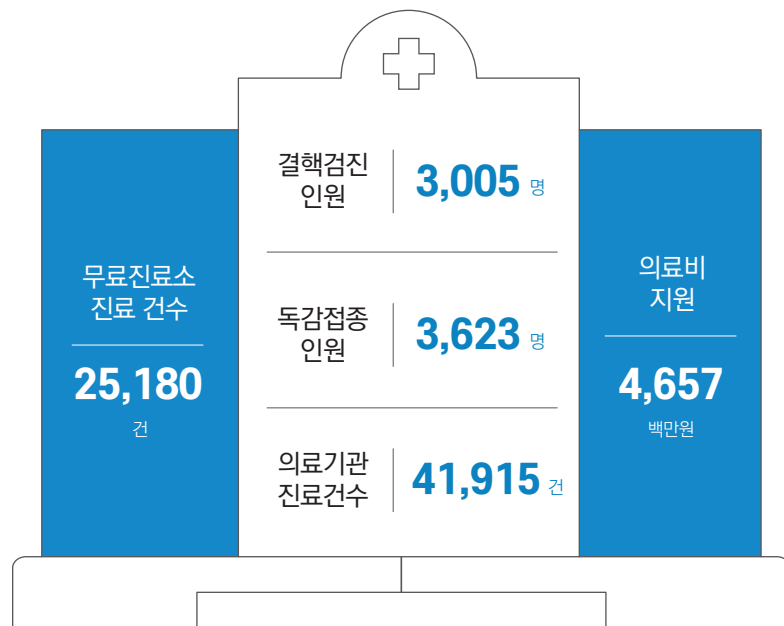
### 거리노숙 위기지원



### 노숙인 주거

노숙인지원주택	38 호
매입임대주택	905 호
공동생활가정	119 호
희망원룸	27 명
임시주거지원	862 명

### 노숙인 의료



### 노숙인 일자리





# 에필로그



노숙인은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 합니다.



노숙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숙인시설의 환경 및  
운영을 개선하고,  
노숙인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과 조례 제정으로  
노숙인 일자리·주거·의료  
정책을 강화하면서  
노숙인 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함께하는  
노숙인복지정책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사진 출처: 서울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등)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

